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vs 반드시 정권교체 vs 서해안 벨트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민주당 경선후보 호남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들이 3차 순회 경선지이자 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역 상인과 당원들을 만나 민심과 관심에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오전 전북 김제시 새만금 소재 새만금33센터에서 '건강한 미래에너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입 국으로는 통계적으로 세계 4위"라며 "에너지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무역 흑자를 줄이는 데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촌이나 바닷가의 놀고 있는 공간에 무한한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지방도 발전하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기후에너지와 호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면 서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4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를 찾아 한강 적기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된 고문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씨와 포옹하고 있다. /뉴스스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24일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김경수 캠프



김동연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24일 전남 장성군 황룡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동연 캠프

이재명 "에너지 98% 수입에 의존 대한민국 새 에너지 패러다임 조성"

김동연 "특정후보 90% 경선 맞나 호남의 당원들이 바로잡아 달라"

김경수, 文 전 대통령 뇌물혐의에 "수사·정치 검찰 완전 해체가 답"

망을 잊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 공약으로 ▲AI(인공지능)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을 육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 호남 육성 ▲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 거점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전폭 지원 및 세계적인 문화·관광 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 광주 등 호남을 방문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전남 목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경기침체 속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수 후보는 앞서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호남은 쳐가 쪽 친척들이 호남에 많이 계시다 보니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쪽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이후에 아무래도 이번 조기 대선에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민주당은 무조건 하나로 힘을 모

아서 원팀이 돼서 정권 교체를 꼭 해달라는 요구가 호남에서 그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평했다.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갖고 전남 장성군 소재 황룡시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꼼꼼히 챙겼다.

김동연 후보는 전북도당당원 간담회에서 "특정 후보에 90%씩 돌아가는 이 경선 구도가 맞는 것인지 저는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을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실 적에 당내 경선에서 70%대 얻으셨다. 호남이 민주당의 앞길을 잡아주셨다. 민주당이 혹시 제 자리 못 잡을 때 또는 잘 못 갈 때 그걸 잡아준 것이 우리 호남의 민주 당원들이다.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연 후보는 호남 지역 공약으로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명칭변경 ▲400조원을 투자해 RE100 서해안 벨트 조성 ▲광역 철도망 구축 ▲전북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등을 공약했다.

한편, 세 후보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에 항의하며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라고 했고 김경수 후보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며 "칼 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칼 자체가 문제다.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6·3·3 원칙'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속도전

대법, 이를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 '6월3일 이전' 결론 가능성에 주목 후보등록 마감 5월11일 전 판결 전망도

친명 정성호 "상고기각 가능성 높아" "대법, 대선 개입… 손떼야" 의견도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로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사건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에 민주당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당일 첫 합의 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노태우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이를 만에 사건 심리를 속행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월 1회 열리는데,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지정할 수 있기에, 월 1회는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스

한 주에 두번이나 열리면서,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내,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는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대법원이 해당 원칙을 지키려면 원칙적으로는 6월26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기에 대법원이 6월3일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지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11일)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

지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추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상고기각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대법원의 속도전에 "(해당 사건을) 털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현실적으로 재판이 어렵고, 그러면 대법원은 5년동안 이 사건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전날(23일) 한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선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대선 후보 등록일 전 파기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내용도 많으니 오히려 상고기각을 하는 쪽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대법원에게 '이번 대선에서 손 떼라'고 경고해야 한다"며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4명, 이재명과 가상대결 뒤져 범보수 진영+반 이재명 모으기 전략

보수 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포함한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구성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회의적이었던 후보들이 사실상 입장을 바꿔 빅텐트 가능성을 열고 있다.

'한덕수 대망론'이 보수 진영에서 탄력을 받는 이유는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랑 가상대결을 불어도 큰 차이로 뒤지는 조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대로 최종 경선 후보를 선출해도 본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으니, 최종 경선 후보 선출 후 범보수 진영과 반(反)이재명 세력을 한 데 끌어모아 바람을 일으켜보자는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4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후보들과 맞붙더라도 45%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간 3자 대결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선 경선 후보가 26%, 이준석 후보가 7%였으며 이재명·한동훈·이준석 구도에선 이재명 후보 45%, 한동훈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21%, 이준석 후보 8%였다. 이재명·안철수·이준석 구도에선 이재명 후보 46%, 안철수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를 택한 사람이 17%,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7%였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출마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한 대행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경선 후보들은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다. 흥준표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되기 위해 모든 정치체제를 끌어안고 가려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도 같은 날 자신의 SNS

에 글을 올려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우호적 메시지를 냈다.

/박태홍 기자